



2013년 국정감사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보도자료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성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3. 10. 22.(화)~	담당자	박 소 희 비서
------	-------------------	-----	----------

▶ 과세 사각지대,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 미성년자의 주식·예금·보험에 대해서도 출처조사 필요

- ☞ '12년 말 기준, 미성년자 8만 4,000명이 시가총액 1조 2,360억원 규모의 주식보유, 1인당 평균 1,471만원 수준!
- ☞ '13년 8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5만 4,728계좌 1조 7,467억원 규모, 생명보험 7만 9,006계좌에 2조 1,193억원, 손해보험 2,357계좌 757억 6,300만원 보유

▶ 「개방형 세정지원단」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세정지원단의 경험과 전문성에 맞게 업무부여 필요

- ☞ 최근 5년간 약 5,400명의 신규직원 채용. 그 중 2,700여명의 여직원이 결혼적령기에 접어들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

▶ 성실납세자 선정 규모가 대폭 감소

- 우대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장기 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각종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어

▶ 납세자 불복 77%가 수도권에서 발생

- 국세청의 세증시 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 우려

▶ 세무조사 결과 통고처분 과정에서 줄어든 매출수정액 100억원(사례)

- 근거자료가 들어있는 USB는 어디에?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

과세 사각지대,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서울청/중부청)

–미성년자의 주식·예금·보험에 대해서도 출처조사 필요해–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주택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세금 부담이 적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고액 전·월세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는 주장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1,770만여 가구 중 자가 점유비율은 약 54%로, 770만 가구는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주거

특히, 특별한 소득없이 수 십 억원을 호가하는 고액 전세 가운데, 본인의 소득이 아닌 증여 등 탈루된 자금이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는 추정

- 국세청은 강남·용산 등 지역 등의 전세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월세 1천만원 이상인 세입자 중 나이·직업·소득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소득을 탈루한 혐의자에 대해 조사 중임

- (미성년자 주식 과다보유) 2012년 말 기준, 미성년자의 주식보유 현황은 8만 4,000명이 시가총액 1조 2,360억원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1인당 평균 1,471만원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성년자 주식보유 현황

(단위 : 천명, 십억원, %, %p)

구 분	주 주 수						시 가 총 액					
	2011년		2012년		증감	비중 차이	2011년		2012년		증감	비중 차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세미만	92	1.8	84	1.7	△8	△0.1	3,951	1.4	1,236	0.4	△2,715	△1.0
전체	5,225	100.0	4,947	100.0	△278		277,952	100.0	298,902	100.0	20,950	

주) 주주명부상 출생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자료:한국거래소

- (미성년자 예금 등 과다보유) 2013년 8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4,728계좌, 1조 7,467억 3,300만원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320계좌 2,012억원, 5억원 이상 92계좌 1,69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미성년자의 계좌가 79,006계좌에 2조 1,193억원, 손해 보험에도 2,357계좌에 757억 63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미성년자 계좌 수 및 예금 등 잔액 현황

(2013년 8월 현재, 단위: 좌, 백만원)

	전체		1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과세 대상 합계	
	계좌 수	잔액	계좌 수	잔액	계좌 수	잔액	계좌 수	잔액	계좌 수	잔액
은행	10,559,718	7,578,061	53,316	1,375,874	1,320	201,235	92	169,624	54,728	1,746,733
증권	73,798	171,280	1,434	42,417	112	22,781	32	41,221	1,578	106,419
손보	-	-	2,273	60,927	80	12,173	4	2,663	2,357	75,763
생보	-	-	75,542	1,467,876	3,286	506,255	178	145,173	79,006	2,119,3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자료: 금융감독원)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자녀에게 주택을 사주면 바로 세원이 노출되지만,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를 하면 세원 포착이 잘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포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질의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월세 자료의 제출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자료수집에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나, 고가 전세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국세청의 세원확보 노력은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3) 임대자 뿐만아니라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4) 미성년자 보유 예금 등의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주식 1조 2,360억원, 예금 1조 7,467억원, 생명보험 2조 1,193억원, 손해보험 757억 6300만원으로 나타났음.

2013년부터 예금 등을 배우자나 자녀명의 계좌에 1,500만원 이상의 돈을 입금하는 순간 곧바로 증여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죠?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증여세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15년 동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질의 5)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인 54,728계좌의 1조 7,467억원은 모두 증여 대상으로 봐도 무방한 것인지?

[서울, 미성년자 예금]

은행별	연령	최고액(백만)
A은행	11세	12,000
B은행	11세	10,500
C은행	2세	180

[경기, 미성년자 예금]

은행별	연령	최고액(백만)
D은행	13세	1,328
E은행	17세	3,847
F은행	19세	8,130

질의 6)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이 계좌가 본인의 차명계좌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차명재산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게 됨. 2013년 1월 ~ 9월까지 차명계좌 입증 현황은 어떻게 되고, 10월 현재 이 시스템에 등록된 차명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2009년말 차명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완료,

질의 7) 미성년자가 주식·예금(16개 시중은행)·보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약 3조 9,417억원에 수준임. 여기에 비은행권 자금에 부동산 등 자산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인데, 관할지방청별로 미성년자의 자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지?

질의 8) 2012년도 기준으로 미성년자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1,361억원(5,019명)으로 그 수준이 매우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예금, 주식 등 고액 자산을 가진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 상속·증여세율

<과세 표준>	<세 율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개방형 세정지원단」의 운영·실태 (서울청/중부청)

- 세정지원단의 경험과 전문성에 맞게 업무부여 필요 -

□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약 5,40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음. 그 중 2,700여명이 여직원이고, 이들이 점차 결혼적령기가 되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육아휴직 인원 : '07.12월 191명 → '12.6월 현재 806명 (322% ↑)

- 휴직자로 인한 여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
- 이 같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정 이래 처음으로 120억원을 들여 ‘개방형 세정지원단’을 구성한 바 있음

〈출산·육아휴직 관련 세무관서 현장실태〉

- #1. (A씨 부서 과장) 우리과 여직원의 배가 불러오면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워야하나....., 다른 직원에게 맡겨야 하는데 직원들은 자기에게 일이 맡겨지지 않나 서로 눈치보고 있고 관리자로서 참 고민거리입니다.
- #2. (B씨 부서 출산예정 여직원) 육아휴직을 앞둔 요즈음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출산·육아휴직은 당연히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제 일을 누군가 고스란히 떠맡아 고생을 해야 한다니 동료 직원에게 미안 할 따름입니다.

- ‘개방형 세정지원단’은 근무예정자를 지역별로 모집하는데 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청·중부청·대전청 소속의 12개 지역에서 총 670명을 선발

- 세무행정과 전산행정으로 나누어 계약직 7호와 계약직 9호 등 2개 직급으로 선발함

지역별 모집 인원

구 분	계	세무행정		전산행정
		한시7호	한시9호	한시9호
계	670	166	484	20
서울청 4개 지역	310	85	217	8
중부청 7개 지역	300	77	211	12
대전청 1개 지역	60	4	56	-

※ ‘개방형 세정지원단’: 출산·육아휴직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사전에 선발하여 휴직자 발생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력풀 제도임 (행안부 인사규정의 ‘대체인력 뱅크’를 의미)

□ 질의 및 정책제언

질의 1) ‘개방형 세정지원단’은 현재 어느 정도 인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실제 일정기간 동안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평균 몇 달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지?

질의 2) 국세청의 ‘개방형 세정지원단’ 제도는 2012년 정부 인사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음.

그러나, 이들의 주된 업무가 문서접수 및 정리, 전화수신 등 단순 업무에만 국한돼 “주로 히드렛일만 맡기고, 정규직원들이 보안문제 때문에 업무를 맡기려 하지 않는 등”의 지적이 있는데,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정규 직원의 대체업무를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 취지와 달리 운영되다 보니 실익이 미미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방청장/중부지방청장의 견해는 ?

질의 3) 위 사업을 일자리 나누기(job - sharing)로 전환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반듯한 일자리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방청장/중부지방청장의 견해는?

- (제언) 세정지원단제도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 업무의 한계로 인해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듯함. 지방청장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파악해서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림.

성실납세자의 선정 대폭 감소(서울청/중부청)

□ 현황과 문제점

○ 국세청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는 공항전용 심사대 이용혜택 제공, 통신/주유 요금 혜택, 모범 납세자 전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 납세에 대한 자긍심과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음.

- (세제상의 우대)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등
- (사회적 우대)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주차장 무료이용, 대출금리 경감, 의료비 할인혜택

○ (장기 성실납세자 선정 오류) 국세청은 장기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기업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우대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장기 성실납세자로 지정되어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어 문제임.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우대배제 업종은 소비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사금융 등이며, 호텔·여관업, 유흥주점, 사금융, 무도장, 성인오락실, 안마 등임.

-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개인은 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2010년 ~ 2013년 동안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합계	36	74	25	7	142
법인	11	16	6	7	40
개인	25	58	19	-*	102

* '13년 선정작업 진행 중

부적격 선정된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청 별	계		2010년		2011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합 계		275	3	64	3	211	
배제업종 적용오류	서울청	1		1			
	부산청	85		32		53	
장부기록 불 이 행	서울청	1		1			
	부산청	188		30		158	
조사경정	중부청		1		1		
사업기간	대전청		2		2		

□ 질의 및 제언

질의 1) 장기성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 모두, 선정 수가 감소하고 있음.
2010년 3만 6,000건 선정되었던 것이 2012년에는 2만 5,000건, 2013년 8월말 7,000건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 2) 장기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성실납세 기업 선정 제외가 일선 세무서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선정 제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질의 3)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일환으로 국세청에서는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심사 시 가점 부여라든가, 보증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방위사업청 물품·장비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이와 관련해 조달청과 협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모범납세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서울지방청장/중부지방청장의 견해는?

납세자 불복 수도권 발생 77%(서울청/중부청)

- 국세청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 우려-

□ 현황과 문제점

- 국세청은 2014년 말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임.

그러나 전체 납세인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국세심사업무와 법인 등 주요세원과 역외탈세, 해외투자, 수출업체 등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본청의 기능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대기업 세원정보 수집, 검찰·경찰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 조세박물관 운영 등 홍보기능 일부는 효율적 업무 추진 차원에서 수도권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납세자 불복 수도권 비율

지역별 납세인원 현황			
구분	전체	수도권	비율
2011년	13,591,780명	7,812,771명	57.5%

2012년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심판청구, 고충신청 현황			
구분	전체	수도권	비율
합 계	14,498건	10,087건	69.6%
과세전적부심	266건	196건	73.7%
심사·심판청구	5,608건	4,133건	73.7%
고충 신청	8,624건	5,758건	66.8%

자료: 국세청

- (세종시 이전에 따른 납세자불편)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도권 거주 불복 청구인의 불편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도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 필요.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세무조사권에 대한 견제 및 조세불복·고충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주요 이용자가 영세한 납세자와 고충신청자임을 고려하면 77%의 납세 불복자(수도권 거주)들은 세종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조세심판원과 함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불복기회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 *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의 확보·유지를 위해 국세청장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것이 유리

- (세종시 이전에 세원정보 관리) 수도권에 역외탈세혐의자와 금융·국내 대기업·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유용한 정보를 확보·활용하는데 적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함.

* 최근 뉴스타파가 9차례에 걸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이 중에 신원이 확인된 38명의 경우 36명(97.7%)이 수도권에 경제적 근거지(주소포함)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국제거래의 보편화로 인한 내국법인의 무역규모 및 해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대기업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73.3%,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영 비중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 중요 세원정보 수집·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타 정보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 유지 필요성이 제기됨

* 사정·정보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만 세종시로 이전하여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 협조 체계 유지 어려움

□ 질의

질의 1) 전체 납세자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원의 비중은 절반이 넘는데,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그간 수도권의 영세납세자들의 과도한 세금에 대한 이의창구 역할을 수행해 오던 납세자보호관까지 이동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영세납세자들의 불복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대기업 등 중요세원과 역외탈세, 해외투자, 수출업체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방대한 세원정보 수집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본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기존 본청의 기능 중 일부를 흡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두 분 지방청장의 견해는?

세무조사 결과 통고처분 과정에서 줄어든 100억원(서울청)

- 압수한 USB 15개 사라지고, 관련 과징금 처분 대상자는 소송을 제기해-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201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3,632억원을 추정했다고 발표하였음. 당시 현금 24억원을 자택에 보관한 유명 A산부인과 여성 병원장(네트워크 병원)에게 1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당시 벌금 처분을 받은 의사 한 명이 국세청의 매출 추정액이 축소되었으며, 국세청이 압수한 물품에 추가 과세할 자료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국세청의 매출누락 : 조사당시 매출누락 추정액 157억원 ⇨ 조세범칙조사 심의요구 시 144억원 ⇨ 45억원(국세청 기자회견, 2012년 4월 23일)으로 축소됨

* 매출누락금액의 대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매출 추정액 100억원 감소(여 의사 '봐주기' 주장)

최초 매출누락 추정액

심의요구 시 매출누락 추정액

[참조]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외부 체크리스트									
1. 조세모달입의금액의 검토표									
내역	세금	세율	세액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26-세납부 유형	15,285	12.5%	2,788	510	289	285	744		
1 세납부	15,285	12.5%	2,788	510	289	285	744		

2. 세액 신고 사실 등									
연도	세액	세율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세액
2007	3,279	759	213	4,297	855	227	1,038	95	79
2008	2,888	489	242	7,521	1,384	435	4,633	895	391
2009	5,900	1,606	306	10,287	2,100	621	4,186	1,013	537
2010	4,943	899	278	9,485	1,217	334	4,552	452	223
합계	16,990	3,093	999	31,290	5,479	1,619	14,419	2,353	1,230

- 국세청의 왜곡보도 : “세금 탈루 당사자의 잘 못 보도와 검찰 고발 없었다”
 - 세금 탈루의 당사자(장소): 여 의사 (집) ⇨ 네트워크 병원대표 원장(남자) (오피스텔)
 - 고발: 여 의사 검찰 고발 ⇨ 여 의사 징수 통보처분



- 국세청의 압수 USB 존재 부정

당시 압 수 목 록

병원 제출요구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서울형정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2012. 10. 12. 자 국세청 답변]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문서 중 「2. 작성한 usb 회계장부」는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문서입니다. 원고가 신청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작성한 이종장부를 요청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과세처분 및 세액제산의 근거가 된 파일은 이미 원고측에서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열람한 자료입니다.									

- (제언) 국세청은 8.29 채신안을 통해 변모된 모습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동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